

공정한 원칙과 공익을 우선하는 기여입학제의 도입

문 창 재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기여입학제 도입 문제 논의에 앞서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이 제도의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제정난 타개를 염두에 둔 사립 대학 측의 주장과 요구라고 해서 무조건 거부하고 외면할 일이 아니라 구미 선진국과 일본 등이 이 제도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이 우리 교육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80년대 후반 사립대학측이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이래 우리 국민의 뇌리에 '기여입학제 = 기부금 입학제'라는 인식이 못박혀 있다. 그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기여란 결국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미덕이므로 부유층에 대한 특혜가 될 뿐이라는 반대론자들의 공세가 먹혀들었기 때문이다.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느 나라보다 유별난 우리 국민정서의 특성 때문에 이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역적이라도 되는 듯 온갖 비난과 공격을 감내해야 했다.

기여입학제란 말 그대로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의 자손을 해당대학에 입학시키는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여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얼마 이상의 돈을 내면 아들을 합격시켜 준다는 식의 현금 거래성만 없으면 재정적 기여에 대한 보상을 무조건 거부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뒤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지만 공정한 원칙과 공익 우선의 운영을 전제로 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가진 학생에 한해 정원의료 소수의 재정기여자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은 대학의 재량권으로 인정할 때가 되었다.

마지고 보면 대학의 학생선발에 정부와 사회가 그렇게 민감해야 할 이유는 없다. 큰 원칙의 전제 아래 보면 학생선발권은 대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학생을 뽑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든 그것은 대학의 재량권에 속하는 일이다. 더구나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보다 많은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 잘 가르치는 대학은 살아남고, 그 경쟁에서 패하는 대학은 존립할 수도 없는 대학의 품질경쟁 시대가 되었으므로 학생선발에 관한 정부와 사회의 간섭과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새 교육부장관이 철칙과도 같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동결 해제를 외치고, 대입전형의 다양화를 강조하는 것도 대학의 자율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대학들이 시행중인 특별전형 제도는 넓은 의미에서 기여입학제나 마찬가지다. 대입 전형의 다양화란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전형의 유형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의 경우 순국선열과 독립유공자 자녀, 농어촌

출신자, 장애자, 선행자 등에게 특전을 주고 있다. 순국 선열과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특전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국가와 민족의 독립과 국권회복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지만, 농어촌 출신자 등에 대한 특전은 형평성 시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학은 농어촌이 우리 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치른 희생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바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장애자는 인도적 입장에서, 선행자는 인성교육 강조를 위해 특전을 제공한다는 것이니 누가 시비를 걸겠는가.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30세가 넘는 만학도에게 특전을 주는 대학도 있다. 거액의 스카우트 비용을 들여 유명선수를 받아들이는 운동선수 특별전형 제도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입상자나 슈퍼모델 탈렌트 선발대회 입상자에게 주는 특전도 따지고 보면 유명선수나 대중의 스타가 대학 인지도를 높여 대학발전에 기여할 미래의 공로에 대한 사전 보상이다. 또, 다른 과목의 성적은 형편 없어도 특정 과목이 우수하거나 글짓기와 같은 재주가 뛰어난 학생에게 특전을 주는 제도도 예상기여에 대한 보상이다. 또,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은 감독과 코치는 욕을 해도 대학당국을 욕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런데 유독 재정적 기여자에 대한 보상만은 안된다고 한다면 이 역시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재정 기여자에 대한 자녀 입학 보상의 대 전제는 돈으로 자녀의 입학을 사는 형식을 배제하는 일이다. 얼마 이상을 내면 넣어준다는 인식이 형성되고, 그 돈이 사학운영자의 사복(私服)을 불리는데 이용된다면 이 제도는 도입해볼 필요도 없이 실패다. 가령 어느 대학에 실험실이나 도서관을 지어주었다거나 특정 분야의 장학기금 또는 연구기금을 내 대학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한해 기여 행위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엄격한 기준으로 사정하게 함으로써 즉흥적인 현금기부에 대한 보상을 배제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입학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원의 1~2% 정도로 규정해 성적 우수자의 억울한 탈락을 방지하고, 입학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해야 한다.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 기증이나 현금기부 같은 재정적 기여가 있을 경우 철저한 사용원칙과 투명한 운용이 따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기여재산관리위원회 같은 조직을 두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고,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장학금이나 시설 확충용으로 용도를 못박으면 '부의 사회환원'이란 미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여입학제를 가진 자에 대한 특혜라는 논리로 매도만 한다면 도피성 유학을 조장해 국부 유출을 촉진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떠나서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에 근무할 때 대학에 적을 둔 유학생보다 몇 배나 많은 학생들이 도쿄 간다(神田)학원가에 우글거리는 것을 목격한 일이 있다. 그 수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영어권 국가에는 비교도 안될 정도라니 교육 때문에 얼마나 많은 외화가 새어나가는지 짐작할만 하다. 이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조기유학 붐까지 불어 교육당국이 이의 양성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 엄청난 비용이 모두 기여입학제 불허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제도가 허용된다면 상당액을 절약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대학이 지금과 같은 재정난에 허덕이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 대학의 재정난은 심각하다. 면적은 옛날 그대로인 캠퍼스에 다다다다 불어 선 강의동 안팎에서 웬만한 읍 인구보다 많은 2만여 명의 학생이 장바닥처럼 붐빈다. 대학제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70%선에 가까운 현실에서 유일한 방법은 등록금 인상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대학끼리 연대해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에 기를 쓰고, 물가를 겁낸 정부도 갖가지 수단을 동원해 인상을

낮추려 한다. 오랜 재정난이 쌓여 대학의 교육환경은 날로 뒷걸음질이다. 학생 1인당 교수수와 교사면적은 국제적인 비교는 커녕, '60·70년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지경이다. 이런 재정난을 타개해 보자고 몇몇 사립대학이 대대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 일이 있었다. 총장까지 팔을 걷고 나서 주로 동문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이 운동으로 1,000억원 안팎의 모금성과를 올린 대학도 있으나 대부분은 액수를 밝히기 부끄러울 정도였다고 한다. 자녀나 후손이 그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한 자신이 나온 대학일지라도 재산을 기부하고 싶은 의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국·공립대학들까지 기여입학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유명 사립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버클리나 UCLA 같은 주립대학들도 장학금 기부자 자녀에 대한 특별입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이 제도가 없다고 하지만, 사립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의 음성적인 기부금 입학제도 때문에 문부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학 부설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운영도 크게 보면 기여입학제도다. 웬만한

월급쟁이는 감당할 수 없는 비싼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에게 같은 계열의 중등학교와 대학 입학을 보장하는 것은 변형된 기여입학제라 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주부의 유치원생 살해사건의 배경에는 유명한 국립 여자대학 부속유치원 입시를 둘러싼 학부모끼리의 갈등이 있었다.

공산주의 사회인 중국에서까지 자비생 제도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기여입학제를 시행하는 세상에 무조건적 평등을 이유로 기여입학제를 거부하는 것은 재고해 볼 문제라 생각된다. **☞**

문창재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 신문연구소를 수료하였다. 한국일보 주일특파원, 국제·기획취재·사회·정치2부장, 편집국차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동경특파원 보고서」, 「지구촌 한민족(공저)」 등이 있다.